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1. 1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월 19일(수) 14:00~18:11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4호, 제6호~제12호 및 보고 제1호~제2호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의결 제4호~제5호, 제7호~제12호, 제250호(2021) 및 보고 제1호~제2호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4호 『(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 의결안건 제5호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現상무님의 임기만료가 언제까지인지?

- (보고자) 임기는 2년임. 임기만료 시점은 각자 다름.

○ (위원) 현재 임원 총수가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임원이 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1인이 있고, 그 외 집행간부가 4인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보시면 됨.

○ (위원) 그러면 현재 상무 4인이 전부다 D직급(본부장/부장)으로 변경되는 형태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당사자들에게 유불리가 있는지?

- (보고자) 현재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임기만료까지 있으시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집행간부를 새로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전 제250호(2021) 『(주)에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증선위가 지금까지 제재를 하면서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시킨 건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변함이 없는지?

- (보고자) 이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액이 줄거나 아니면 전액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조치일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달라져서, 예를 들어 제재심과 증선위의 심의일정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그 사이에 금액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가단위 혹은 등록단위가 늘어나서 최소유지자기자본의 금액이 달라진다고거나 아니면 자기자본의 의미 있는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증선위 안전보고 시에 참고내용으로 같이 제공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금투업권의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회사들에 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과태료를 부과할 때 1번, 위반행위 내용이 지나치게 중대하다면 과태료를 전액 부과함. 2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건수, 위반결과, 재발가능성 기준에 2개 이상 해당한다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분의 50이나 10배 초과 이중 작은 금액으로 우선 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나 납부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추가적으로 감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동의함.

- (위원) 그러면 금감원이 보고한 제재기준을 이 안건에 대해 적용해 보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위반행위가 46건으로 10건 이상 발생했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금융질서를 저해한 경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검사 실시 이후에도 의무위반행위를 계속했음. 그러므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됨. 어쨌든 이 회사가 감경 없이 과태료를 전액 부과할 정도로 악질적인 것은 아니니까 감경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를 부과려고 했더니 너무 작음. 그래서 아까의 2번을 적용해서 100분의 50과 10배 초과 부분 감경을 봤더니 10억 원이 됨. 그런데 이 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 10억 원을 부과하면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는 등 납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래서 최근 제재심 심의 시점까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4.75억 원이 자본금이었기 때문에 최소 자본유지요건인 1.75억 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3억

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리고 향후 금투업권 정도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규모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방금 제가 정리해 드린 적용방안을 감안하셔서 금감원 원안을 마련할 때 참고하시기를 증선위가 권고를 할 테니까 금감원 관련부서에 공유하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 송창영 위원 퇴장(의결안건 제6호 회피)

□ 의결안건 제6호 『(주)아이온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주)아이온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 변호사 임.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안전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본 건은 (주)아이온자산운용 ◇◇◇ 대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건임. 위반금액은 4억 원이고, 이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75%의 적용률에 해당함. 저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다만, 제재심에서 신용공여가 발생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못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소명 드리고자 함. (주)아이온자산운용은 ◇◇◇ 대표의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2018년 코스닥스케일업펀드, 2021년 정책형뉴딜펀드 운용사로 선정되었음. 신생 자산운용사가 설립 후 몇 년도 안 되는 기간에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임. (주)아이온자산운용의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이라는 화장품 유통회사였음. ◇◇◇ 대표가 창업을 준비할 당시 회사 경영과 펀드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최대주주로 투자를 받았던 것임. ○○○○○○은 대표이사 형제와 부인들이 100% 주식을 보유한 가족회사였음. ○○○○○○은 ○○○○라는 재무적,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부실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됨. ◇◇◇ 대표는 최대주주의 상장사 인수를 반대했음.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재무적, 형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고객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임. ○○○○○○ 정상화에 수백 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 마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급기야 최대주주인 ○○○○○○은 (주)아이

온자산운용을 사유화하고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음. (주)아이온자산운용의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하였고 펀드의 운용 내역을 보고하라고 하였음. 최대주주의 사유화 시도를 막고 고객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체 임직원들은 최대주주의 주식을 전부 사오기로 했음. 임직원 대표는 2018년 3월7일 ○○○○○○ 측에 보유주식 전부를 임직원들에게 매도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임직원 통고문을 보내게 됨. 결국 ◇◇◇ 대표는 2018년 4월 주당 7,000원에 당시 최대주주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증까지 받았음. 최대주주 주식 모두를 7,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주)아이온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펀드의 1호 운용사로 선정되었음. 선정 후 대주주의 확인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했음. 최대주주는 대주주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며 주식 매매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였음.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뒤집는 최대주주와의 협의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 대표와 임직원들은 사의를 표명하였음. 다만, 당시 운용 중이던 펀드들만 청산을 마치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음. 하지만 당시 최대주주는 펀드 운용기간 중 펀드매니저가 바뀌는 경우는 흔히 있다며 펀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두고 나가라고 하였음. 그러나 ◇◇◇ 대표를 보고 돈을 맡긴 펀드들을 그대로 두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과 또 다시 무의미한 계약을 할 수 없고, ◇◇◇ 대표는 진퇴양난(進退兩難) 상황에 빠지게 됨. 당시 시장에서는 (주)아이온자산운용을 문제 있는 자산운용사로 매도하는 악의적 소문이 떠돌게 되

었음.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몇 개월의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1,000억 원 규모의 정부정책자금을 운용하게 되었는데도 대주주 확인서 하나만을 제출하지 못해 펀드 런칭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던 중 급기야 풍문은 기사화 되고 말았음. 한국성장금융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경우 펀드런 사태가 발생해 고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됨. ◇◇◇ 대표로서는 여러 방안을 고심해 보았으나 고객들의 손해방지를 위해서는 ○○○○○○○, ○○○○○○와의 관계 단절이 불가피하였고, 결국 ○○○○○○○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그렇게 하여 기존 공증계약서의 주식 인수대금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원에 ○○○○○○○의 주식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대주주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감원에 제출할 수 있었음. 펀드런 사태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고객들의 손해를 간신히 막을 수 있었던 것임. ○○○○○○○ 측의 부당한 주식가격 인상 요구가 없었다면 기존 공증계약서대로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 4억 원의 신용공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자본시장법 편제상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제’는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에 입법 취지가 있음. 이 사건 신용공여의 목적이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오히려 회사가 ○○○○○○○과 ○○○○○○에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진정성을 살펴보아주셨으면 함.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였다면 고객과 펀드가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고 공증계약서대로 이행청구를 하였거

나, 사임 후 가용자산 19억 원을 활용하여 새 출발을 도모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진정성을 살피주시기를 바랍. ○○○○○○의 □□□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음. 그리고 2014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던 수범과 유사하게 ○○○○○○는 약 1조 원대의 마스크 계약을 허위공시하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음. 그리고 ○○○○○○○○은 ○○○○○○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관계사들을 동원하여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의 2021년 부채비율은 650%에 육박하여 존속 가능한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임. 만약 2018년 당시 대표이사가 개인의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 ○○○○○○○○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단절하지 못하였다면 (주)아이온자산운용은 ○○○○○○의 관계사로 동원되고 고객자산은 부실화되어 금융거래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임.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 자산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회사와 고객을 지키고자 하였다는 대표이사의 진정성을 참작하시어 위반행위 동기의 부과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시 (주)아이온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은 법무법인으로 자문을 받은 적은 있음. 그러나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대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해당 자문이 ◇◇◇ 대표이사에 국한되는 것으로만 이해하였음. 만약 법 위반이 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규와 내규 중 가장 합법적 방법을 강구하여 본 건의 신용공여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만약 계획적·조직적으로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계좌 간 이동이 드러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직원 ㉠㉠㉠이 조사단계에서 자진

하여 차용증을 현출하지도 않았을 것임. 뿐만 아니라 조사단계에서 자신이 빌렸고 대표이사에게 빌려드렸다고 일관되게 먼저 진술하지 않았을 것임. 그리고 상환과정에서도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음. 법 위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2020년 2월28일 적법한 대여금인 1억 원에 대한 상환을 먼저 했을 리 만무함. 즉, 법 위반 부분을 먼저 상환하여 위반 한도 축소를 시도하지 않았을 이유가 회사에는 없음.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XX투자증권이 특수관계인 甲, 乙 회사에 출자한 액면금액 총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의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여 신용공여 한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손실발생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50%를 감경한 8,8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의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수정심의 내용대로 의결된 바 있음. 이 사건의 경우 XX투자증권의 사례와 신용공여 액수가 유사한데 대여금을 꾸준히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위반한도를 줄이고 있었기에 추가적인 손실발생 우려가 없었음. 그리고 2020년 11월경 신용공여액이 전액 상환되어 추가 손실발생의 우려가 없으니 이 사례와의 유사성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감경해 주셨으면 함. 또한, 3차례에 걸쳐 신용공여를 하였고 회수 노력이 전무했음에도 15%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투자자문 사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양정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사료됨. 이 사건의 경우 행위 방법적 측면에서 단 1회의 위반이고 자발적으로 상환해 왔으며 한도초과가 전부 해소되어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음. 주식회사 위리치펀딩 사건, 스카이 투자

자문 사건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참작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부과율이 이 사건의 75%보다 현저히 낮은 25%와 50%에 불과함. 이 사례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과징금의 양정에 가혹한 측면이 있음을 비례성 원칙에 따라 고려하여 주셨으면 함. 신청인은 이 사건 신용공여가 있기 전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경고나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제재는 신청인에게 매우 뼈아픈 오점이며 이에 대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임. 다만, 과거 대주주였던 ○○○○○○○ 측의 위법행위와 맞서 싸우며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고자 불가피하게도 이 사건 신용공여가 발생한 측면이 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당시 전격적 주식매입 이외에 다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고객보호를 위한 대표이사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보고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림. 결과적으로 ○○○○○○○○ 및 ○○○○○○와의 관계 단절을 통해 현재 ○○○○○○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점도 깊이 참작하여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사건 과징금의 양정에 가혹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함.

- (위원) ○○○○○○○○ 측의 긴박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라든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원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액이 발생을 했음. 반드시 회사로부터 4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그 당시에 4억 원은 최종적으로 23억 원의 자금이 모두 투입 되면서 마지막에 남은 금액임. 그전에 이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식보유 부분에 있어서 회사 자본금에 들어간 금액이 11억 원 상당이었고 추가적으로 23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23억 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 채권 등 모든 자산을 처분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차용 등의 방법으로 어렵사리 19억 원을 마련하였던 것임. 이같이 마련한 금액 19억 원이 ◇◇◇ 대표님께서 출자하셨던 기존의 11억 원과 합쳐진다면 거의 30억 원이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현금으로 마련되기에는 쉬운 방법은 아니었음. 마지막에 잔금이 남은 상황이었고 그 잔금도 저희가 제출한 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주식을 같이 매입하기로 하였다가 공증계약까지 마친 계약서를 ○○○○○○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확인서 제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난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수하기로 하였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4억 원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차에 그 부분이 직원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가 있었기에 자신이 빌려서 빌려드리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이 된 것임.

- (위원) 결국 주장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위반 정도를 경감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신데, 위반행위 동기와 위반행위 방법이 ‘상’이 아니라 ‘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또는 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저희가 받았던 법무법인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준법감시인이 당시 차장이었음. 다른 직원들은 당연히 이보다 더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음. 법무법인 ▲▲의 의견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불가능함을 실시하고 있고 그 특수관계인 중에 하나로 임원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당시 법무법인 의견서에 직원이라는 명시 부분이 없음. 명확히 '임원이 아닌 자를 통하여서는 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신뢰하였고, 만약 '상'이나 '중'이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동기 부분에서 고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또한 위반행위 방법 부분에서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17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 만약에 회사에서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이 현금 전체 17억 원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 폭리적 행위를 통한 유보된 증액 금액에 해당하는 4억 원만 대여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함.
- (위원) 아까 위반행위 방법에 대해서 ㉠㉠㉠씨가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대여가 가능한 것처럼 변호사 의견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씨 명의의 차입금이 실제로 대표이사 주식취득에 이용될 것이다, 그런 질의를 하

지는 않으셨는지? 형식과 실질이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점검(check)해야 될 책무를 외관적으로만 요건을 맞춘 것이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미비했음. 거꾸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차명거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 방법에 있어서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측면으로도 평가가 될 수 있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당연히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추가적 법률 검토를 의뢰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죄송한 마음이 듭. 하지만 당시 법률검토 의견서의 내용은 대표이사가 얼마의 한도에서 신용공여가 필요한지에 추가하여, 범무법인 ▲▲에서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융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4가지 정도 모두 다 기입해 준 의견서였음.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간접적인 회피적인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당연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한 그런 과오가 있기는 함. 그러나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는 계좌 간 이동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신용공여 행위가 있지 않았을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함.
- (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범무법인에서 그런 의견을 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 대표 본인이 돈을 쓰기 위해서 ㉠㉠㉠ 부장님 명의로 “직원은 된다더라. 직원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나한테 빌려줘.”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정황은 있는 것인지?

- ▶ (진술인) 아님.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임. 그런데 이것이 위법이라는 상황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함.
-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그런 제안을 ◇◇◇ 대표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 하에 제안을 했던 것임. ㉹㉹㉹ 직원의 제안에 따라서 했던 이유는 법무법인 ▲▲의 의견서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임.
- (위원) ㉹㉹㉹ 부장이 ◇◇◇ 대표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 ▶ (진술인)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최대주주의 횡포가 너무 심각했고, 저희는 신생으로 시작해서 직원들이 같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외압에 의해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음. 마침 당시 신용공여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그러한 의견서가 왔기에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은 안 되시니까 제가 빌려서 그것을 제가 대표님한테 빌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제가 직접 제안을 드렸고 제가 증인이고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징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고, 사실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것이 제가 그렇게 제안 드렸는데 이것에 대

해 대표님이 오해받으시고 신상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책감도 들고 부끄러움. 대표님이 저한테 뭔가 사주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임.

- (참여자) 법무법인 ▲▲의 법률자문은 대표이사님 앞으로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던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참여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법무법인 ▲▲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것 아닌지?

▶ (진술인) 그러함.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 주었던 의견서임.

- (참여자) 그러면 그 부분이 일반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궁금해 하고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통 문서로 끝나지 않고, 담당자와 직접 전화를 하고 그럴 텐데, 그때 법무법인 ▲▲의 담당 변호사님하고 “말씀하셨던 그 문구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특수관계인이나 회사대표 명의를 아닌 일반직원 명의로 대여한 다음에 그 대여금을 회사 대표가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 (진술인) 이 의견서의 기초적인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자금

을 대여할 것에 대해서 얼마 한도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주된 것이었고, 그러면 범무법인 ▲▲에서는 당시의 준법감시인인 □□□ 차장과 전화가 있었고 대충의 사정 내용을 들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참여자) 제 질문은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직원에게 대여해서 그 돈을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라는 이런 식의 확답을 들으셨느냐는 것임.

▶ (진술인) 그것은 아님. 이런 의견서가 있다는 것을 당시 경영 쪽을 담당하던 ㉸㉸㉸ 부장과 준법감시인이던 □□□ 차장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신용공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9년도 1월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급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범무법인 ▲▲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던 점이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직원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받고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전후 사정은 전혀 그렇게 된 것이 아님. 그리고 □□□ 차장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임원이 아닌 것과 직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음.

▶ (진술인) (주)아이온자산운용 ◇◇◇◇ 대표임. 제가 회사를 처음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 지분이 40%였는데 40%가 11억 원이었음. 23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전부 다 동원한 것임. 회사를 그만 두고

펀드만 정리하고 나가려고도 했었고 도저히 회사에 더 이상 못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럴 경우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죽든 살든 회사에서 붙어 있다가 펀드를 다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임. 그리고 제가 최후의 순간, 그러니까 잔금 지급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신용공여를 하였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돈을 구하다가 안 되어서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정말 뉘우치고 있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문제가 있고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음. 그것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알게 됐음. 금감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제가 다 상환을 하고 변제해서 한도초과를 해소했음. 제가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14분 정회)

▷ 송창영 위원 입장

(16시35분 속개)

□ 의결안건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현재는 인가증, 등록증 이런 것이 없는지?

- (보고자) 금융법에서는 2015년부터 은행법, 저축은행법, 보험
업법 이렇게 차례로 도입되었고 자본시장법이 네 번째 법으
로 도입되는 상황임.

○ (위원)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 관련해서
자금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여전채 편입비율 이런 것을 포함
하는 것인지?

- (보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의 분산 운용은 여전채 위주
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채를 대상으로 보유비율을 낮
추는, 그리고 한 번에 낮추면 또 여전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023년까지 현재의 15%에서 12%,
8% 점점 이런 식으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외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2020년 3월에 처음 코
로나가 발생했을 때 일부 증권회사에서 해외 쪽에 연계된
ELS를 발행해서 마진콜 때문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상황
이 있었음. 단순한 외화자산이 아니라 외국 국채나 현금이나
외화예금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 비율
가지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호 『키움증권(주)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종금투 사업자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21년 9월30일 현재 3조 365억 원으로 3조 원을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재무제표를 보면 자기자본이 3조 5,924억 원임.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 (보고자) 금투업규정상 최근 사업연도말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만 합산되도록 되어 있음. 3조 5,924억 원이 된 부분은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추가로 계상되어 실제로 자본금 증자에 따른 금액은 3조 365억 원이 맞고, 3조 5,924억 원은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추가로 하여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위원) ‘투자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희석화 방지목적의 전환비율 조정 외에는 전환비율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인도할 주식수량이 변동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비율이 조정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지금 가격재조정(Refixing)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환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됨.
- (위원)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해서 자기자본 요건을 맞춘 것 같은데, 자본확충이 보통주로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 (보고자) 자금조달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상환우선주(RCPS) 발행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 1년에 8,0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으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고 나중에 증권사가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원)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
- (보고자) (주)◇◇◇◇이 최대주주인데 500억 원을 (주)◇◇◇◇에서 조달하고 있고, 12~13개 금융회사가 나머지 3,50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 하나투자증권이 한 600억 원 정도 했고, 증권사들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했음.
- (위원) 개런티 해 주는 배당율 같은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지금 최초 우선 배당률이 한 3.9% 그다음에 Trench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호 『하이투자증권(주)의 (주)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호 『하이투자증권(주)의 (주)하나리치업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후 출자승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2호 『하이투자증권(주)의 (주)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후 출자승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0호 『(주)○○○○○○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1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당시에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지했던 부분이 있었음.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미공개정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음. 그리고 그 유상증자 1주일 전에 주가가 상한가 수준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것이 미공개정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매매하여 차익이 실현됐음. 이것이 미공개정보라는 것을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님.

○ (위원) 유상증자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이번에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인지를 했음.

○ (위원) 상장한지도 꽤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

▶ (진술인) 공시책임자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4시간 정도 받는 것이 있음.

○ (위원) ●●● 진술인 이외에도 세 분이 더 있는데 이분들도 다 동일한 입장이신지?

▶ (진술인) 미공개정보와 6개월 단기매매 차익 부분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음. 그래서 임원은 주식을 사거나 매도할 때 6개월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지, 어떤 미공개정보를 인지하고 그때는 팔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음.

○ (위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운용해서 회사 주식을 거래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임원이 주식을 살 때는 투자자분들이나 주주 분들이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너무 큰 못매를 맞게 되다 보니까 차명거래를 이용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미공개정보인 것을 인지하면서

350만 원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설프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임. 그리고 저는 유상증자 되기 전에 임원주식매도에 대한 소유상황보고서를 정상적으로 공시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11분 폐회)